

‘5극3특’ 지방시대… 해수부, 지방 주도 수산업 혁신 시동

강원지역 어종 변화·산업구조 분석
동해안 수온 상승 대응 혁신안 마련
가공 공정 스마트화 등 체질 개선

제주·전남 등 6개 권역 의견 수렴
오는 3월 설명회서 최종 전략 발표

해양수산부가 27일 이른바 ‘5극3특’ 중심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수산 현장에도 잘 뿌리내리도록 지역별 기후를 비롯해 입지, 인프라 특성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이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체제로 전환해 지방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해수부는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

/뉴시스

안’에 대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지방

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겹돌지 않도록,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히 구현되도록 실행력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

도다.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 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 나가고 있다.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수산업에 ‘실물인공지능’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중 어업인·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부문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권익위, ‘해묵은 관성민원’ 완전 해소한다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관계 기관·전문가 협업 통해
되풀이 되지 않는 해결 목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돼 온 집단민원과 공공갈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 KT&G 세종센터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복잡·점예한 집단갈등민원과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사진)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작년 6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집단민원 선제 대응 및 범부처 협업 해결’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그간 권익위는 집단갈등민원을 고충처리국에서 분산 처리해왔으나, 이날부터는 전담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정



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조정·협약의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으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민은 9375명에 달한다.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강원 양구 고성도 구간 교량화 요구, 경기 성남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충남 당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집단갈등조정국은 특히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상담관, 법

률·소통 전문가, 퇴직 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0명 이상을 사안별 전담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권익위는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갈등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도입

산업 관리 체계 고도화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가 이달 하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 도입은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 및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 산업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최초 신규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와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신고 기능까지 통합해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체에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 수출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 ‘안전경영·국민체감 성과’ 목표

‘전국 부서장 토론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경영 확립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본사·지역본부·지사·사업단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방안 공유·안전실천 결의대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 공유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공사는 ▲안전 관리체계 정비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확대와 촘촘한 지원 ▲내실 있는 점검과 강력한 제재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실천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의 ‘안전 레드라인’

선언에 따라 부서장들이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안전 레드라인은 공사 안전수칙 5대 핵심 항목을 기반으로 설정한 현장의 최소 안전 기준이다.

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과제도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KRC(농어촌공사)-AX(AI 전환) 추진전략’, ‘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성공적 이행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동서발전, 제주에 국내 최대규모 BESS 구축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향후 15년간 전력계통 안정성 기여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제주에 구축해 본격 가동한다.

동서발전은 2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 준공식을 열고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발전소는 총 140메가와트시(MWh) 규모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력저장발전소 가운데 최대 용량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조천읍 관계자,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LG에너지솔루션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북촌 전력저장발전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남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에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 특성상 발전량과 수요 간 불일치로 출력 제어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이를 완화하는 ‘전력망 완충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또 주파수와 전압 안정도 개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등 계통 안정화 기



제주북촌베스발전소 조감도.

/동서발전

능도 수행한다.

동서발전은 2023년 국내 최초로 중앙계약시장방식의 BESS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발전소는 지난해 5월 착공했다. 140MWh 규모의 배터리는 약 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15년간 제주 전력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